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SQ)’*

안 상 훈** · 정 해 식***

◀ 요약 ▶

이 연구는 복지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인의 복지지위에 따른 사회의 질에의 인식이 어떤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복지태도의 개념적 수정 혹은 확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인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적절히 측정되었음이 밝혀졌다. 둘째,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에 복지지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복지지위는 사회적 위험인식을 낮추고, 낮은 사회적 위험인식은 사회의 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복지지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사회적 제도를 배치하여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가용한 경제력을 확보하게 해주며, 공식·비공식 조력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07-411-J01601).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hoonco@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butty@snu.ac.kr)

주제어: 사회의 질, 복지지위론,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구조방정식모형

1. 서론

이 연구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관한 근자의 학술적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인의 인식 속에서 사회의 질이 어떤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복지국가에 관한 개념적 수정 혹은 확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그 이론적 목적을 둔다.¹⁾ 동시에 사회의 질에 관한 학술적 담론을 보다 실증적인 복지인식 연구와 연결시킴으로써 주로 이론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사회의 질 연구의 지평을 본격적인 경험연구로 연장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들이 그 배경이다.

첫째,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발전의 내용과 경제발전 위주의 한국적 패러다임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실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지난 시기 한국사회가 일궈낸 경제적 기적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발전된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Yee and Chang, 2009).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이러한 일반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이 담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구조의 양극화와 같은 부정적인 양태로 변질되어 나타남에 따라,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기대가 서서히 종언을 고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획득한 글로벌 경제가 요구하는 ‘경쟁력 강화’와 그러한 헤게모니에 짓눌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은 사회정책을 경제성

¹⁾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의 수정 및 확대와 관련된 서구의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필자가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의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비교사회정책연구의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이 개념에 토대를 둔 아시아 및 유럽 복지국가 비교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의 부록쯤으로 치부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자체도 그 장기적 전망이 밝지는 않으며, 동시에 발전개념의 확장에 관한 인식이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항상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을 결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련의 실증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시장질서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확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²⁾ 당장 한국사회의 경우만 보아도, 증가하는 불신과 배제, 발전국가의 특징이었던 구조적 역량(structural empowerment)의 둔화내지는 약화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Yee and Chang, 2009).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일시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반적 발전의 지표(indicator)’로 기능하던 GDP의 유용성에 대한 의의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즉, GDP와 같은 경제지표는 심리적 만족, 행복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형평성의 차원, 환경오염과 같은 경제적 번영의 부수적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듯이, 현 시점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을 경제성장이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의 질 개념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사회지표의 대표적 사례이며, 한국사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의 통합에 관한 요구를 이론적 견지에서 보다 정치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학술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질이란 무엇인가? 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1997: 3)에 의하면, “사회적 질이란 시민들이 그들의 복지와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하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사회의 질 개념의 요체는, 시민들이 노동시장 참여나 혹은 국가로부터의 급여이전을 통해서 경제적 삶의 안전성을 보장받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이다.³⁾

²⁾ 이 논문을 완성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한국경제학회·한미경제학회 공동세미나에서도 한국경제학회장의 발언을 통해, 더 이상 합리적 인간과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유효하지 않음이 천명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2010년 8월 11일자 기사).

³⁾ 경제적 삶의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 또는 경제적 삶에 참여하는 정도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하지만, 사회·공동체

이와 같은 ‘사회의 질’ 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표로서의 사회의 질’이다. 경제발전이 곧 사회발전의 정도를 대변한다는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면서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가치지향으로서의 사회의 질’이다. 사회통합의 지향이나, 새로운 유럽의 사회모델로서의 사회의 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은 사회통합의 영역에 초점을 두어 발전하고 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한국사회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학의 관심은 격심한 변화에 대응할 시대적인 의제로서 한국사회의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이재열, 2007). 하지만, 기존의 개념틀로는 최근의 변화가 내포하는 복잡다단한 측면들을 포괄하기는 역부족이었으므로 새로운 개념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사회의 질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부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복잡다단한 변화상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의 질에 관한 학술적 관심의 배경이다.

지금까지의 연구향방을 가늠해볼 때, 아직까지 사회정책학 분야에서 이 개념이 익숙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인 사회정책학적 유용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상황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연구의 경우, 사회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인식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회의 질에 관한 주관적 지표들, 즉 사회의 질에 관한 개인들의 인식은 결국 복지정책의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정책학적 연구로서 복지제도와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들 역시 사회의 질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요컨대, 복지가 제도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사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등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의 질 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사회측,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정도는 주관적 지표의 성격이 강하다. 이 주관적 지표는 사회 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이라는 미시지표에 해당한다.

후,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s modelling) 분석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미시적 수준에서 반영하는 복지지위의 차원들이 사회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인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복지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며, 결국 사회의 질 개념도 복지국가 개념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2. 사회의 질 논의

1) 사회의 질 논의의 탄생배경

(1) 포괄적 사회진보 지표에 관한 학술적 각성

‘좋은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는 많은 국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 때 ‘좋은’ 사회라는 개념은 상당히 가치지향적이며, 불가피하게 논쟁적이다. 때문에 ‘좋은 사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어느 사회가 지난 시기동안 발전을 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Yee and Chang, 2009). 따라서 발전 혹은 사회진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GDP이다. 대공황과 양차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경제회복이 사회의 최우선 관심사였고, 이런 면에서 사회진보는 곧 경제발전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진보의 지표는 경제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1934년 쿠즈네츠(Kuznets)가 개발한 GDP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DP는 사회진보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많은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GDP가 비금전적 활동과 불평등, 안녕, 삶의 만족도와 같은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Costanza et al., 2009; Yee and Jang, 2009 재인용).

GDP로 대표되는 경제지표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지표에 관해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그 중 하나가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이다. 삶의 질 접근은 사회적 지표 체계를 통해 주관적 웰빙(well-being)과 객관적 삶의 기준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한다.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진 미국에서는 주로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복지(well-being)에 관심을 가졌다. 삶의 질을 이론적 용어로 언급한 최초의 학자는 Lawton(1983)으로, 그는 행동능력, 객관적 환경과 관련하여 인식된 삶의 질로 ‘좋은 생활(good life)’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자면 삶의 질은 각 개인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 주관적으로 인식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 접근은 사회발전의 양적이고 질적인 도구가 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삶의 질 개념은 사람들이 적극적 행위자로 기능하기 보다는 주어진 사회구조와 물질적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측정지표의 성격이 강하다. 다음으로, 삶의 질 접근은 인간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관련요소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으며, 가치중립적(value-neutral)이라는 면에서 사회의 질에 비해 GDP를 극복하는데 일정정도 한계를 노정한다고 할 수 있다(Yee and Chang, 2009).

한 사회의 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1960~70년대에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삶의 질 개념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GDP의 보완과 사회발전, 사회전체의 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의 개념이 추가되는 특징을 보인다(이희길·심수진, 2009:3). 이렇듯 포괄적 사회지표에 대한 학술적 각성의 결과는 사회의 진보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사회진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사회의 질 개념은 쉽게 말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사회의 질적인 수준⁴⁾을 총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Walker and Van der Maesen, 2003: 16).

Walker and Van der Maesen(2003)은 포괄적 사회지표로서 사회의 질과 삶의 질의 차이를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사회적 제도의 배치의 질이라는 조작적 개념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둘째,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를 통한 체계 구성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회의 질 논의는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적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지표로서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의 차이는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도 확인된다.

⁴⁾ ‘quality of society’, 즉 종종 ‘사회 관계의 질’로 해석되기도 한다.

삶의 질 접근의 방법론이 국가와 시간에 따른 지표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개별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삶의 질 지표가 나타나는 양상을 표현하는 정도에서 머문다면, 사회의 질 연구는 어떤 이유에서 삶의 질 차이가 나타나는지 나아가 그러한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과정까지 설명하려고 한다. 즉, 삶의 질 논의가 주로 현상을 묘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면 사회의 질 논의는 비교대상의 국가들 내의 불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결국, 일상적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사회의 질 연구가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통합유럽의 사회모델로서의 사회의 질

‘지표로서의 사회의 질’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가치지향으로서의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도 사회의 질 논의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사회의 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유럽에서 출발하였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단일 시장, 마스트리히트 조약 및 거시경제의 수렴원칙에 따라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발전이 수준이 아닌, 사회정책수준의 수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Bouquet, 2006). 유럽의 복지모델이라고 할 정도의 명확한 보편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복지지출 수준을 비슷하게 하려 하지만, 재정제약으로 인해 전통적 복지제도만 축소·변형하는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유럽의 사회모델은 각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로 유럽통합이 세계화라는 경제적 자유주의 모델 하에서 진행되면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권리라는 유럽의 전통적 이상을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hillips, 2006). 따라서 새로운 유럽의 사회모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서 EU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른다(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 1997:2).

이와 같이, 유럽의 학계가 사회의 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그에 주목한 것은 경제정책만이 아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총체적인 정치·경제·사회적인 기획, 포용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정진성, 2009: 4). 결국, 이들이 사회의 질 개념을 통해 주목한 것은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논의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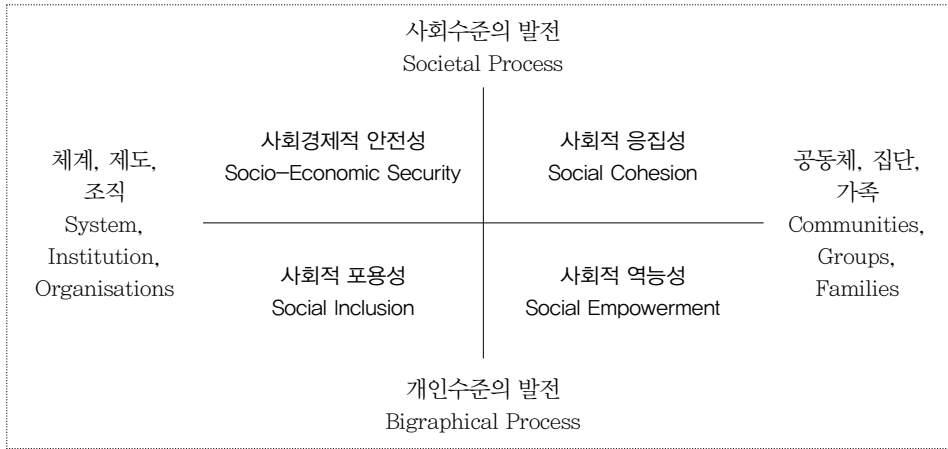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이래 사회경제적 안정성에 주목하였던 삶의 질과 사회보장의 관심,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사회의 질 논의에서 개념과 지표의 영역이 확장된 것은 기존의 복지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등장과 그에 대한 학술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안정옥, 2009: 174). 이런 면에서 보자면, 사회의 질에 관한 유럽의 논의들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혹은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성에 관한 학술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사회의 질 개념의 구조와 특징

(1) ‘사회의 질’ 사분면

사회의 질은 시민들이 그들의 복지와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 1997: 3). 사회의 질은 사회수준의 발전과 개인수준의 발전이라는 수직적 연속체와 체계·제도·조직의 형성과 공동체·집단·가족의 형성이라는 수평적 연속체 상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4개 분면으로 이뤄진다. 각 하위 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회의 질 사분면



첫째 영역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즉, 빈곤 또는 다른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자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질의 유급노동과 적절한 생활수준 및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영역은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체계, 제도, 조직과 구조) 속에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도와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영역은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이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 내에서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 및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영역은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이다. 사회적 역능성은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수단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역능성은 사회구성원이 정치나 소속된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사회의 질의 네 가지 하위영역의 구분은 개인수준의 발전과 사회수준의 발전 사이의 연속선과 공식화된 사회 체계와 비공식화된 생활세계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도출된

다. 따라서, 좋은 사회란 네 가지 하위영역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이다(Walker & Van der Maesen, 2004; 이희길·심수진, 2009 재인용).

사회의 질의 네 개 하위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 분면은 공식성의 영역에 해당하며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역능성의 분면은 비공식성의 세계지만, 객관적 지표로 구성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으로 이는 비공식성의 세계이며, 주로 주관적 지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공식/비공식의 영역구분과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혼합은 한 사회의 양적인 수준과 질적인 수준을 모두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의 질 논의는 사회의 양적인 수준과 질적인 수준을 모두 나타내는 사회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이태진·박은영, 2009: 49), 삶의 방식 또는 삶의 질과 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구성의 성격도 가진다(Herrmann, 2006).

(2)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사회의 질 개념에서 사회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집합적 정체(collective identities)의 형성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본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사회는 개인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자기실현은 다시금 사회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이 네 개의 기본조건이다. 사회의 질은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자아실현’이라는 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사회적 제도의 배치의 질이라는 조작적 개념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제도의 질적인 측면이다. 사회적 제도의 배치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돕는다. 여기서 사회적 제도의 배치의 상당부분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상황으로 대변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가 제도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에 따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사회의 질 사분면을 볼 때, 공식적 영역인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비공식적 영역인 사

회적 역능성은 비교적 명확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하고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특징을 사회의 질과 연결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친 사회의 질 개념의 첫 단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이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정규고용이나 복지국가의 소득안전망에서 탈락되어 있는 사회 소외계층의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였던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Pierson, 2002: 4). 이후 논의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여러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학술적 정의도 다양하게 축적되었다. 예컨대, Levitas(1988)는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를 세 가지 담론적 경향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적 통합론으로 유급노동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Pierson(2002: 7)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가족, 집단·이웃들에게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박탈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사회의 다수가 향유하는 제도·서비스,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서 탈락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이다. 빈곤과 저소득 외에 차별, 낮은 교육수준 등과 같은 요인들도 배제의 원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성 개념은 시민들이 가용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배치의 수준이다.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포용성의 영역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치 방법에 따라서 주관적 인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와 이런 체계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얼마만큼 높은지는 양적으로 측정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수준으로 측정가능한 사회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평가는 복지의 제도적 배치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사회의 질 연구는 자원과 맥락(context)의 영역을 구분해서 볼 것을 요구한다. 즉,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과 달리,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의 개념은 정체성, 가치, 규범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가 공유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응집은 가용한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개인적 집합적 자율성, 책임있는 참여와 같이 구성원 모두의 장기적 안녕(well-being)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이다(Council of Europe, 2005: 23). 사회적 응집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사회성원들은 목적의식적으로 공동체적 목표나 과제를 달

성하고자 협력적 제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공동체의 주체로서 거듭난다(고형면, 2009: 399). 따라서, 사회적 포용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응집성 개념도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사회제도와 사회적 인프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치형태에 따라 사회의 질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 평가가 구성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사회의 질 개념은 가용한 자원의 배치와 더불어 이와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공동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개인을 형성하는 것까지를 사회의 발전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개념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범위를 기존의 빈곤개념보다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 개념 역시 EU의 정책결정자와 학자들에게는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차원의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Room, 1997: 331). 이에 따라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적 틀이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복지국가 지표로서의 사회의 질, 그리고 복지지위와의 관련성

1) 사회의 질(SQ)에 대한 사회적 지표들(social indicators)⁵⁾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의 하위 영역은 재정적 자원, 주거 및 환경, 건강 및 보호, 고용,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의식주에 사용되는 가구소득 비율, 자격조건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의 비율, 자가소유비율, 1만명당 의사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 비율 등이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다른 하위 분면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고 평가받는다. 빈곤, 실업, 열악한 건강과 물질적 결핍의 다양한 형태에 대항하는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되는데, 이 영역에서의 지표들은 자명하고 쉽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하위 영역은 시민권, 노동시장,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 포괄되어 있는 정도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투표권을 소지한 사람의 비율, 공

⁵⁾ 각 영역의 하위지표 구성은 Keizer et al.(2003), Walker et al.(2003), Berman et al.(2004), Herrmann(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적연금의 가입율, 장기실업율, 공적1차의료서비스 이용비율 등이 있다. 사회적 응집성 분면은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관계,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이 분면의 대표적인 지표는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정도, 주당 자원봉사 시간과 같은 이타주의의 측정, 정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의 멤버십과 같은 사회적 관계, 국가에 대한 긍지와 같은 국가정체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 분면은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성과 지지성, 공적공간의 구성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가독력과 수리능력의 비율, 사회서비스의 다국어정보지원, 일가족양립정책 시행기관의 비율, 협의과정 및 직접민주주의 과정의 존재여부, 자발적·비금전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 공공재정의 비율 등이다.

사회의 질 개념은 처음 제기된 이후 많은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개념적 분석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하위영역에서의 지표들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정도의 합의가 도출된 단계까지는 아직도 달하지 못하였다.⁶⁾ 사회의 질 사분면들은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사회적 응집성의 분면이 그러하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들, 특히 주관적 지표와 관련된 차원이 지표에 관한 합의를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주관적인 지표들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의 질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사회의 질 영역은 조직적·제도적 측면에만 주목하면서 주관적 수준에서의 가치측정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질 영역에 주관적 수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quality of life) 논의가 주관적 지표에만 집중하였던 문제를 사회의 질 논의가 거꾸로 답습하게 된다(Berman and Phillips, 2000:336). 이런 이유로 사회의 질은 새로운 사회지표(new social indicators)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주관적 인식수준과 객관적 복지제도 사이의 인과구조에 관한 기존의 사회정책학적 연구들과 연결되어 복지국가에 관한 새로운 해석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⁶⁾ 현재 사회의 질 지표 체계는 4개 분면, 49개의 하위영역과 9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 복지지위에 따른 복지인식 구조와 사회의 질⁷⁾

사회의 질 사분면에 관한 개인들의 인식은 결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치의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성이 복지인식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경로에서 사회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복지태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복지국가의 제도가 행위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동시에,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연구들은, 복지인식 지형의 다양한 조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Ahn, 2000). 초기의 복지인식 연구들은 주로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보다 최근의 복지정치에 관한 논의들은 계급외적인 새로운 균열들, 예컨대, 고용부문의 균열, 성적(性的) 균열, 소비부문의 균열, 세대간 균열 등을 강조하고 있다(Hall and Jaques, 1989; 안상훈, 2000). 이러한 최근의 계급외적 논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정리한 것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복지지위론’이다(Ahn, 2000; 안상훈, 2000; 2003; 2009).

본 연구에서 분석의 주요 이론틀로 채택하는 복지지위론에서는 세 가지의 복지관련 지위차원들을 제안한다.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그리고,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지위차원들로 구성되며 개인들은 세 가지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고 가정된다.⁸⁾ 이제 아래에서는 복지지위에 따라 사회적 위험과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복지지위론의 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지위론의 첫 번째 차원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이다. 어떤 개인이 국가복지의

⁷⁾ 복지지위론에 관한 아래의 이론적인 논의들은 Ahn(2000), 안상훈(2000; 2003; 2009), 김은지·안상훈(2010)의 개념적 설명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의 질 논의와 연결지었다.

⁸⁾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니는 의무는 복지납세자로서 지니는 의무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Ahn, 2000). 복지납세자로서 지니는 의무의 측면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사회상황에 크게 의존적이지 않아 거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일반화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니는 의무는 사회적 성격이 짙어 국가별 복지제도의 수준과 구성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국가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위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고용가능성의 증대라는 견지에서 권리에 가까운 측면이 많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개인의 의무이자 복지정치의 견지에서는 별다른 이해관계를 낳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되면,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균열은 소비욕구를 자신의 사적 소득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집단과 국가복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집단 사이에 형성되는데,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지향성은 국가로부터 가시적인 형태의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형성될 공산이 크다(Kemeny, 1981, 1995; Saunders, 1987, 1990; Ahn and Olsson Hort, 1999).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은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의 질과 같은 복지에 관한 인식에서도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복지지위론에 의하면, 복지수급자의 지위는 한 나라의 복지 프로그램의 보편성 정도와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나라의 복지급여가 선별주의를 표방할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복지급여의 질이 떨어질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라 볼 수 있다(Kangas, 1995; Shaver, 1998). 제도적으로 선별주의적이냐 보편주의적이냐의 문제는 개인차원에서는 복지욕구가 어느 정도로 해결되고 있느냐로 치환된다. 즉,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아 복지욕구가 상당히 해결될 경우, 개인들은 사회적 위험을 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가 복지국가에서의 이해관계 균열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의 수준과 그것이 파생하는 인식차원에서의 정치적 의미는 복지정치의 균열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Marklund, 1988; Edlund, 1999; Steinmo, 1993; Wilensky, 1976; Ahn, 2000).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개인적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요컨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는데, 복지납세자로서 납세 부담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으로 복지를 해결하려하거나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공산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높은 세율이 복지반동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거나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 내 개인들의 인식을

결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다른 두 가지의 지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조세부담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나 낮은 수준인 우리의 경우,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오히려 경제력 수준이 개인의 복지욕구 해결수준으로 연결될 것이므로 세금의 수준보다는 경제력 수준의 견지에서 이 지위차원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진다.⁹⁾

(3)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는 전통적 가족의무 하에 사적으로 복지욕구를 담당해야만 하는 돌봄제공자로서의 지위 혹은 복지국가를 통해 일자리를 보장받는 복지일꾼으로서의 지위라는 의미를 동시에 표상한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복지관련 행정 및 서비스 부문의 팽창을 동반했고, 이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 계급론적 용어로는 신중단계급(new middle class)에 해당한다. 복지국가의 피용자로서 신중단계급은 상당한 정도로 성장해왔다. 신베버주의 관점에서는 신중단계급을 ‘서비스계급’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Goldthorpe, 1995),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용된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특징을 지닌다(Erikson and Goldthorpe, 1992). 이러한 경향은 일찍이 ‘중단계급의 급진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Parkin, 1968; Jenkins and Wallace, 1996; Heath et al., 1991). 한편,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에 비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복지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복지국가의 축소는 공공부문의 축소를 의미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는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퇴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복지국가의 유지나 확장을 절실하게 바라게 되는 것이다(Taylor-Gooby, 1991; Dunleavy, 1980; Zetterberg, 1985).

한편, 여전히 국가복지 특히 국가에 의한 일상적 돌봄서비스가 매우 저발전된 한국 상황에서 볼 때는 개인들이 공공부문 특히 복지국가의 일자리와 관련있는 경우를 찾기 힘들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복지국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험적인 실증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인식수준에서 복지서비스제공자 지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론적 대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이 지위차원의 이론적

⁹⁾ 기술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사자료에 납세수준이 명시적으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어 주관적 차원의 계층인식을 경제력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타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개념은 공적인 노동의 장으로서 복지국가 일자리가 일상화되는 맥락의 반대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것이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에서 주로 여성들이 무급으로 떠안았던 돌봄노동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이 다양한 면에서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줄 조력자를 비공식적으로 가지는가의 여부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비공식적 조력자를 가지지 못한 경우, 개인들은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볼 것이며, 사회의 질이 낮다고 평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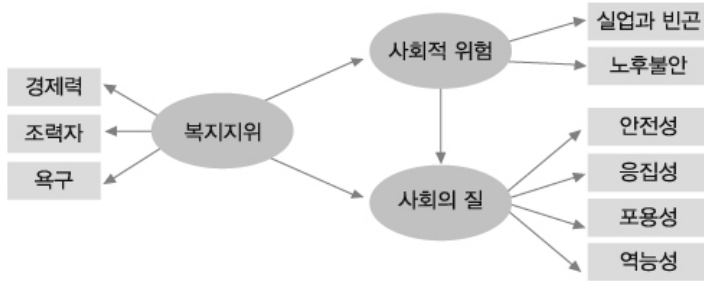
4. 분석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개인의 복지지위,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의 질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s model)의 형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¹⁰⁾

¹⁰⁾ 첫째, 이는 복지지위가 복지태도를 잉태한다는 기존 논리에 기대어, 사회의 질에 관한 개인들의 인식이 복지태도의 일환이라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에서 구성체 ‘사회적 질’은 기존 복지지위론에서의 ‘복지태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질 논의들에서 사회적 배제,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같은 것들은 결국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에서 실업과 노후라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관해 묻고 있어 포괄적인 사회적 질 인식과 복지지위 사이에 사회적 위험을 위치시킬 때 영향관계가 어떠한지도 분석한다.

[그림 2] 사회의 질 분석 모형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으나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가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에 관한 인식은 한 사회의 복지수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확인한다는 면에서 투입하였다. 이 경우, 사회적 위험과 사회의 질 중 어느 것이 경로모형에서 선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복지지위가 사회적 위험에 관한 인식을 통해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에 연결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의 질이 전통적 복지국가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위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후자가 복지제도의 개인수준에의 반영으로서 복지지위에 보다 앞서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차세대에너지안전사업단이 2008년에 실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8년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층화무작위로 추출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 대하여 면대면으로 수집된 전국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977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의 질’은 그 개념 자체가 발전과정에 있으므로 다양한 지표를 통한 추출이 가능하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에 대한 측정변수는 사회의 질 4분면에 대해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은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¹¹⁾

[표 1]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측정방법
사회의 질	사회경제적 안전성	'위험한 사회(-5)' 부터 '안전한 사회(5)'
	사회적 응집성	'불신 사회(-5)' 부터 '신뢰사회(5)'
	사회적 포용성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5)' 부터 '배려와 포용의 사회(5)'
	사회적 역능성	'활력없고 침체된 사회(-5)' 부터 '활력있고 희망찬 사회(5)'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개인의 복지지위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잠재변수가 사회의 질이라는 잠재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지위' 관련 잠재변수는 다음과 같은 관측변수에 의해 지표화된다. 첫째, 개인의 경제력이다. 개인의 경제력은 스스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의 양적인 수준을 말하며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를 한국적 상황에서 표상하는 지표이다.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활용 가능한 조력자의 존재 여부는 복지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표상한다. 구체적으로 가사 도움, 금전적 도움, 심리적 도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조력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조력자가 없는 경우는 0, 있는 경우는 1로 하여 합산하였다. 셋째, 개인의 복지욕구인데, 이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지표화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복지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하여 합산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¹¹⁾ 분석자료로 이용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는 23개의 사회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부분의 측정이 단지 치안이나 범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의 위험과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2] 복지지위 측정을 위한 변수

잠재변수	관측변수	측정방법	
복지지위	경제력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낮은 계층(1)~높은 계층(10)	
	조력자	갑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의 유무	
		갑자기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의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의 유무	
	복지욕구	가계(2)	질병, 사고로 인해 빚을 지거나 사채를 빌린 경험의 유무
			학비부담으로 빚을 지거나 사채를 빌린 경험의 유무
		주거 환경(1)	물, 전기, 하수도나 화장실의 시설이 불량하거나 장기간 작동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의 유무
		건강(2)	장기간 치료/간호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의 유무
			가족의 양육이나 간호가 필요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는지의 유무
		노동 분야(4)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의 유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의 유무
			취업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일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은 경험의 유무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없어 취업에 곤란을 겪은 경험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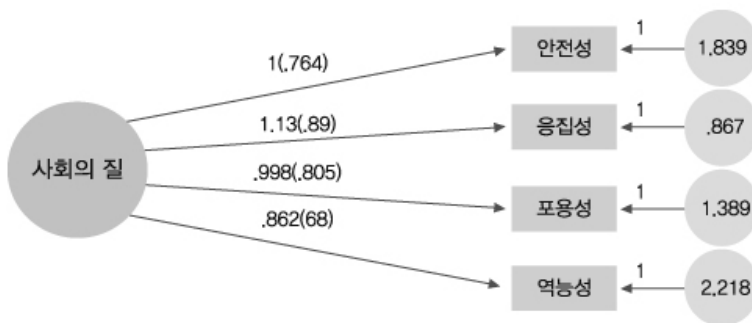
사회적 위험이라는 잠재변수는 각 개인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문항을 통해 확보하였다. 설문문의 전체 문항은 수질오염, 물 부족과 같은 환경분야 뿐 아니라 전염병 등 사회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문항은 복지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실업 및 빈곤’, ‘노후불안’의 두 항목이다. 각각 ‘매우 증가할 것(5)’에서부터 ‘매우 감소할 것(1)’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

서, 종속변수인 사회의 질 개념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¹²⁾. 요인분석의 결과, 4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면서 요인점수가 도출되었으며, 이 요인은 전체분산의 71.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본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사회의 질에 대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3]과 같다.¹³⁾ 각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그림에 각각 제시된 바와 같으며,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림 3]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자. 먼저, χ^2 통계량은 10.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지만, 사례수 977의 상황에서는 다른 적합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¹⁴⁾ 절대적합지수(RMSEA), 증분적합지수(IFI, TLI, CFI)들이 수용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사회의 질 측정항목의 기술치 및 변수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변수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사회적 질	사회경제적 안전성	5.345	2.102	0.134	-0.642	.865
	사회적 응집성	4.731	2.040	0.239	-0.390	
	사회적 포용성	4.487	1.990	0.332	-0.255	
	사회적 역능성	5.503	2.034	-0.092	-0.369	

13) 화살표로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요인적재량이며, 괄호안은 표준화요인적재량이다. 오차변수에 대해서는 오차분산을 제시하였다.

14) χ^2 가 사례수의 함수이기 때문이며 이 정도 사례수에서 바람직한 적합도로서 기능하기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 3]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10.066(2) .007	.064	.996	.987	.996

4)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복지지위, 사회적 위험 인식,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인과적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사회의 질에 대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모형을 포함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완전경로모형(full path model)에 대한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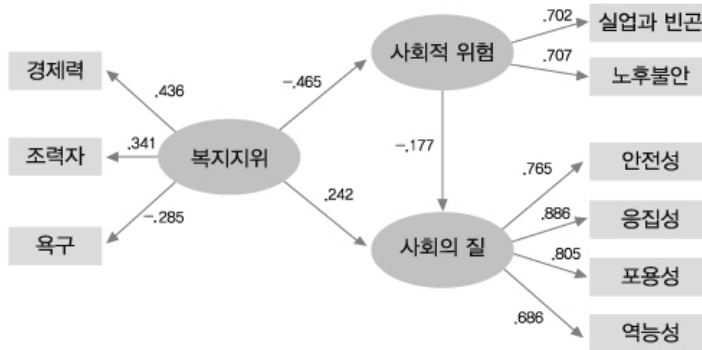
분석 결과, 완전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 통계량이 52.5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절대적합지수(RMSEA), 증분적합지수(IFI, TLI, CFI)는 수용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완전경로모형의 χ^2 통계량과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IFI	TLI	CFI
완전경로모형	52.515(24) .001	.035	.998	.982	.998

완전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4]와 같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의 질은 높고(.242), 사회적 위험인식은 낮다(-.465). 한편, 사회적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의 질은 낮다(-.177). 경제력, 조력자, 욕구로 측정한 복지지위가 높을수록 가용한 사회적 자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복지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완전경로모형의 경로계수



한편, 복지지위가 사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위험인식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간접효과는 .082로 나타난다($-.465 \times -.177$). 매개효과는 정규분포를 기대할 수 없어 bootstrapping 분석을 통해 구했는데,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는 .034였고, 이때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CR이 2.411이었다. 따라서, 복지지위가 사회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에 관한 최근 서구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 개념을 복지국가의 제도를 반영하는 복지지위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인식수준에서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사분면에 관한 태도를 관측변수 혹은 지표로 보았을 때, ‘사회의 질’이라는 잠재변수 혹은 요인이 적절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적어도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에서 질문한 것처럼 사회의 질 사분면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에 관해 응답자들의 인식을 물었을 경우 하나의 구성체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 사회의 질에 관한 인식에 대해 복지지위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복지지위가 복지제도와 관련된 주관적 욕구와 경제적·인적인 자원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경우, 해결되지 못한 욕구가 비교적 적고 경제적·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의 질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 긍정적인 복지지위 상황에 있을수록, 사회적 위험이 낮다고 인식하며, 사회적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수록, 한국 사회의 질이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지위에 따른 인식수준을 연구한 기존 분석결과들과 동일한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복지지위론이 복지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이 가능하다.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지지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복지국가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부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자원이 넉넉할수록, 조력자가 확보될수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지관련 욕구가 해소될수록 사회가 덜 위험하며 사회의 질도 높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들을 시장이나 자원부문 혹은 가족을 통해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므로 복지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것이다.¹⁵⁾ 요컨대, 적절한 사회적 제도를 배치하여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기본이 되는 경제력을 확보하게 해주며, 공식적·비공식적인 조력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며 더욱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의 질 개념이 복지지위나 사회적 위험 등과 같은 변수들, 즉 기존에 복지국가를 설명한 다양한 변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의 질 개념을 주창한 학자들의 주장대로, 사회의 질 개념에 의해 복지국가 개념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관련된 기존의 개념들만으로도 사회의 질이 상당 부분 설명된다고 보면, 사분면 중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요인만으로도 사회의 질 개념의 대부분이 포착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의 질 사분면의 내용들이 전반적인 사회진보의 지표체계로서 기능하

¹⁵⁾ 시장은 물론, 가족이나 자원부문이 지니는 사회정책적 한계에 대해서는 지면관계가 더 이상의 부연을 피하도록 하자.

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인 부문간의 개념적 배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의 질에 관한 논의는 아직 완성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안전성 혹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측면이 여전히 중심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조화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부문들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다고 보는 대신,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사회의 질 개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를 연결지으려는 서설적 연구로서 본 연구가 밝힌 몇 가지 사실들이 후속 연구들을 자극하고 그들에 의해 본 연구가 보강되기를 바랄뿐이다. 복지국가의 산업화시대의 근거들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보다 다면적인 사회발전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사회적 질’ 논의는 실천적인 견지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고형면 (2009). 사회적 응답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질. *사회와 역사*, 82, 393-423.
- 김은지, 안상훈 (2010).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매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309-334.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 복지권과 의무의 세 가지 지위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안상훈 (2003). 친복지동맹의 복지지위균열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비교연구: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사회복지연구*, 21, 79-104.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안정옥 (2009). 사회적 역능성 지표와 사회의 질: 복지체제의 탈상품화 모델에 대한 함의. *사회와 역사*, 81, 169-211.
- 이재열 (2007).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정운찬, 조홍식(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191-259.
- 이태진, 박은영 (2009).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 150, 48-56.
- 이희걸, 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정진성 (2009). 서론. 정진성 외(편).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Ahn, S.-H.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sitetstryckeriet.
- Ahn, S.-H. & Olsson Hort, S. E. (1999). The politics of old age in Sweden. In A. Walker, G. Naegele eds. *The politics of old age in europ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eck, W., Van der Maesen L. & Walker, A. (1997).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rman, Y. & Phillips, D. (2000).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29-350.
- Berman, Y. & Phillips, D. (2004).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al cohesion: 3rd draft*. EFSQ. Amsterdam.
- Bouget, D. (2006). Convergence in social welfare systems: from evidence to explan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1), 109-126.

- Costanza, R., Hart, M., Posner, S., & Talberth, J. (2009). *Beyond GDP: the need for new measures of progress*. The Pardee Paper. The Frederick S. Parde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Longer-Range Future, Boston University.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unleavy, P. (1980).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ectional cleavages and the growth of state employment. *Political Studies*, 28(4), 527-49.
- Edlund, J. (1999). *Citizens and taxation: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Umeå: Umeå universitetets tryckeri.
-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 Goldthorpe, J. H. (1984). The service class revisited. In Butler, T. & Savage, M. eds.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UCL Press.
- Hall, S. & Jaques, M. (1989).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Heath, A. F., Jowell, R., Curtice, J., Evans, G., Field, J., & Witherspoon, S. (1991). *Understanding political change: The British voter 1964-1987*. Oxford: Pergamon Press.
- Herrmann, P. (2006). Social quality - opening individual well-being for a soci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1), 27-49.
- Herrmann, P. (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al empowerment*. EFSQ, Amsterdam.
- Jenkins, J. C. & Wallace, M. (1996). The generalized action potential of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11, 186-208.
- Kangas, O. (1995). Attitudes on means-tested social benefits in Finland. *Acta Sociologica*, 38, 299-310.
- Keizer, M. & Van der Maesen, L.J.G. (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mponent of socio-economic security*: 3rd Draft. EFSQ. Amsterdam.
- Kemeny, J. (1981). *The myth of home-ownership: private versus public choices in housing ten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emeny, J. (1995). *From public housing to the social market*. London: Routledge.
- Lawton, M. P. (1983). The varieties of wellbeing. *Experimental Aging Research*, 9(2), 65-72.
- Levitas, R. (1998).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Basingstoke: Macmillan.

- Marklund, S. (1988). *Paradise lost?* Lund: Arkiv.
- Parkin, F. (1968). *Middle class radicalism*.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hillips, D. (2006). Social quality, values, convergence and the European social mod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1), 1-7.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 Room, G. (1997). *Social quality in Europe: perspectives on social exclusion*. In Beck, W., Van der Maesen, L. & Walker, A.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Saunders, P. (1987).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London: Urwin Hyman
- Saunders, P.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rwin Hyman.
- Shaver, S. (1998). Universality or selectivity in income support to older people?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issues. *Journal of Social Policy*. 27(2), 231-54.
- Steinmo, S. (1993). *Taxation and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 (1991). Welfare state regimes and welfare citizenship.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 93-105.
- Van der Maesen, L. & Walker, A.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8-24.
- Walker, A. & Wigfield, A. (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al Inclusion*: 3rd draft, EFSQ. Amsterdam.
- Walker, A. & Van der Maesen, L. (2003).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ISQoLS Conference Paper, Frankfurt.
- Walker, A. & Van der Maesen, L. (2004).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In Glatzer, W., Von Below, S. & Stoffregen, M. eds. *Challenger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ntemporary world: Advances in quality of life studies, theory and research*.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Wilensky, H. L. (1976).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Sage Publications
- Yee, J-Y. & Chang, D-J. (2009). Transparency, a key factor to improve social cohesion: A review of the Korean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social quality research.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59-275.
- Zetterberg, H. (1985). *An electorate in the grips of the welfare state*.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Opinion Polls.

Welfare Status and 'Social Quality'

Ahn, SangHoon** · Jung, H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ly, This study introduces recent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alternative concept of welfare, that is 'social quality.' Secondly, SEM analysis is performed, in which how welfare statuses of Koreans are related to the attitudes towards social quality. Thirdly, in so doing, we try to explore if we can modify or extend the concepts around the welfare state towards a academically more effective ones.

According to the SEM analysis, following statistical results are visible. Firstly,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are to be measured by four dimensions of socio-economic security, coherence, inclusion, empowerment. Secondly, the more decent welfare status, the more positive attitudes of social quality. Thirdly, welfare status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risk attitudes, and social risk attitudes negatively with social quality.

In order to better social quality in Korea, we suggest more serious efforts should be put forward in Korean welfare state. So as to solve individual needs of welfare, we should devise welfare programs by which we can enhance economic and social capital of individuals.

Key words: social quality, welfare status theory, socio-economic security, coherence, inclusion, empowerment, structural equations model(SEM)

◆ 2010.8.17. 접수 / 2010.10.7. 1차수정 / 2010.11.5. 게재확정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07-411-J01601).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co@snu.ac.kr)

*** Researcher, SNU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butty@snu.ac.kr)